

# 코로나 위기 대응과 금융의 향후 과제

2021. 6. 11

최 흥 식\*, 구 본 성\*\*

\*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본 자료는 발표자의 개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2. 한국의 대응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1. 포스트 코로나 국면과 한국 금융의 평가: 3가지 측면
  -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 2.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비전과 중기 목표
  - 3. 주요 과제
- V. 맺음말



# 코로나 위기로 전대미문의 정책 집행

- 코로나19(Covid-19, 이하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우리나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재정, 통화, 금융 정책을 통해 **실물경제의 과다한 위축을 방지**하고 **금융안정을 도모**
  - 재정 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 금리 인하와 건전성 조치 유예 등 통화 금융 정책을 통해 시스템 위험으로의 전이를 차단
-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방역, 백신 접종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내외 경제활동은 **점차 회복과 정상화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
  - 코로나 위기로 인해 위축된 경제활동은 방역 효과와 백신 접종으로 점차 위기 이전으로 **정상화될 전망**



# 그동안의 정책 평가와 금융부문의 향후 발전 방향 모색

- 그동안 지속된 코로나 위기 대응은 단기적인 충격 완화와 시장불안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부채 문제나 양극화, 출구전략 등 **구조적 변화나 후속 효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도 중요**해지는 시점
  - 경제 활성화 및 금융 안정화 정책에 의한 시장 불안 해소 등 긍정적인 효과 이외에 출구 전략 등 **후속 대책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점
  - 부채 문제나 양극화의 심화,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초래할 **구조적 이슈에 대한 점검**도 필요
- 본 발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정책의 효과와 영향, 잠재 이슈**를 살펴보고, 정상화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발전 방향**을 모색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2. 한국의 대응

-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2) 금리 인하와 유예 조치
- 3) 평가와 시사점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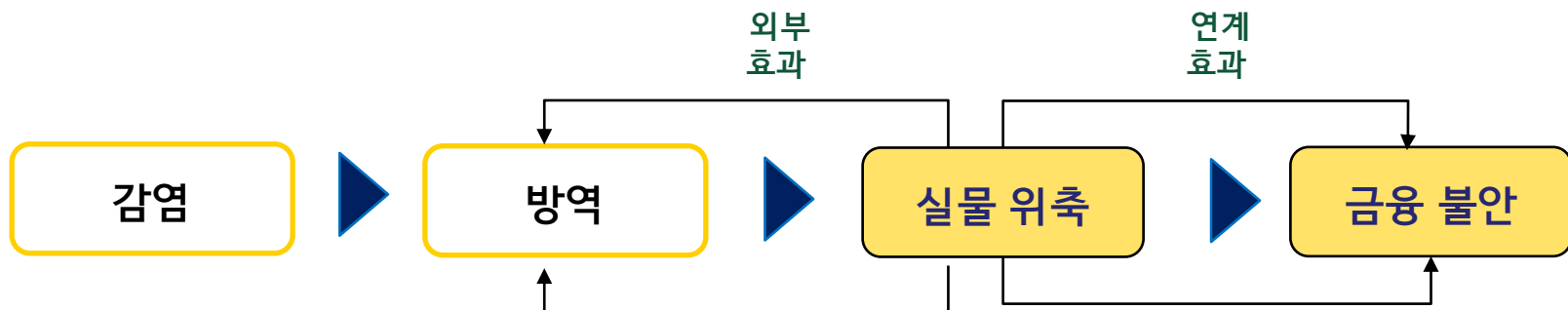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V. 맺음말



# 코로나 위기의 성격

- 코로나 위기의 본질은 전염병으로 인한 실물경제의 위축, 외부 및 연계효과에 의한 금융불안, 그리고 경제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시스템 위험의 통제**에 있음.
  - 전염병으로 인한 감염 위험은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해소
  -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 방역 목적의 봉쇄, 거리 두기, 이동제한 등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하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우려





# 코로나 위기 대응책의 특성

- 코로나 위기 대응책은 외채 혹은 가계부채, 재정적자 등에 의한 경제위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안정과 지원정책에 초점**
  - 동아시아 외환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남유럽 재정 위기 등 경제위기는 자구노력과 구조조정, 손실분담, 채무조정 등 장기적, 구조적인 대응책 필요
  - 반면 코로나 위기는 감염위험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사회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 등으로 시스템 실패를 차단
  - 피해가 불가피한 계층이나 업종, 분야 등에 대해 **직접적, 다각적, 선별적 구제책** 필요



# 위기대응책의 초점은 경제 주체의 재무위험 최소화

- 위기대응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 재정, 통화, 금융정책은 기업과 가계, 개인의 **재무위험(financial risk)**을 **최소화함으로써 구제기능**을 담당
  - 전반적인 경제활동의 위축 ⇒ 기업 부실 ⇒ 가계 파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
  - 재정지출에 의한 경기부양, 금리인하를 통한 조달비용의 축소, 채무유예나 대출확대 등 **유동성 지원**  
⇒ “**불필요한**” 전체 **경제시스템 비용을 최소화**





# 위기 극복을 위해 거시적 위험 분담이 필수적

-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과 극복은 사회경제적 위험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고, 거시적 **위험분담을 통해 해소하는 과정이 필수적**
  - 코로나 위기는 경제적 위기라기보다는 연계효과에 의한 사회경제적 거대위험(catastrophic risk)에 해당
  - 전염의 외부성과 시스템 효과로 인해 **전체 사회의 위험과 손실 분담 불가피**
  -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원한 비용은 **실물경제의 빠른 정상화를 통해 회수 가능**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1. 코로나 위기의 성격과 대응

### 2. **한국의 대응**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2) 금리 인하와 유예 조치

3) 평가와 시사점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V. 맺음말



# 1)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 재난지원금 등 복지대책, 소득 지원 및 비용 경감, 고용 안정 및 일자리 창출, 기간산업의 안정화 조치 등으로

## 1차 위험을 차단

- 피해부문 지원과 소득 지원, 유예 및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도 위험을 방지**
- 고용 안정**을 위한 지원금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
- 방역 조치로 인한 소득 및 사업 위험 차단을 위해 **보편적 지원과 선별적 조치를 병행**



# 주요 재정 확대와 소득 지원 정책

## 피해부문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부가가치세 부담 경감 등)
- 업종별 대책(항공, 해운, 관광, 공연, 외식 등)

## 유예 및 연장

- 사회보험료, 제세금 등 납부유예 및 대출·보증 만기연장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선결제·선구매

## 소득지원과 비용경감

- 긴급재난지원금
- 기초생보·차상위 대상 소비쿠폰, 아동수당 수급대상자 특별돌봄쿠폰, 긴급복지지원제도 한시 확대
- 사회보험료 감면 및 중소·중견기업 R&D 부담 경감

## 고용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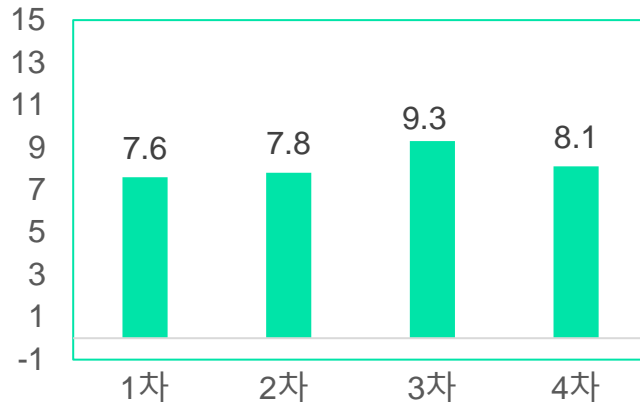
-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재직자 고용유지 지원 강화 및 실업자 생계 및 재취업 지원 확대
- 공공 및 청년 일자리 55만개 창출

## 기간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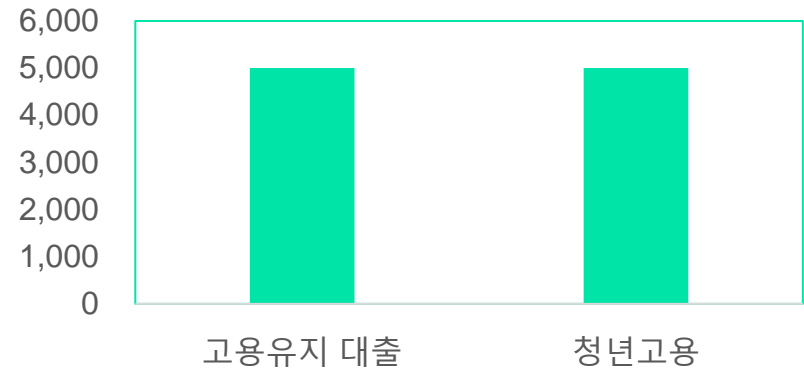
- 국민경제, 고용안정 등 영향이 큰 항공·해운 및 기타 기간산업·기업에 유동성 공급, 자본력 보강 등을 통해 복합지원
- 수혜기업에 고용유지, 정상화 이익 공유,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상응하는 지원조건 부과

# 긴급재난금 등 주요 지원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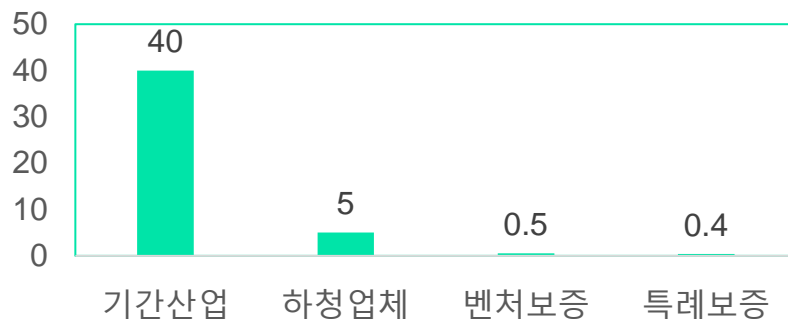
재난지원금(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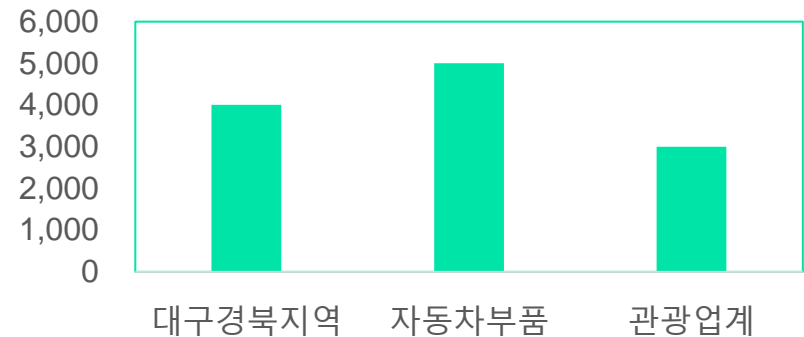
고용연계 지원(억 원)



기간산업 등 지원(조 원)



특별지원(억 원)





## 2) 금리 인하와 유예 조치

- 대내외 **유동성 공급기반**을 확대함으로써 금융시스템 위험 차단
  - 적극적인 **금리인하**
  - 전 금융권에 대한 **특별유동성 지원**
  - **시장안정화** 조치
  - 통화스왑 체결로 **외화유동성 확보**
  - **기간산업 지원**
  - **건전성 기준 완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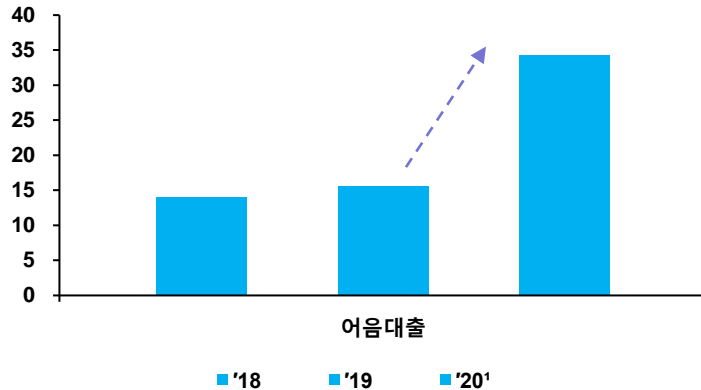


# 주요 금리 인하와 유예 조치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math>\Rightarrow</math> 0.50% (<math>\Delta</math>0.50%p('20.3.16), <math>\Delta</math>0.25%p('20.5.28))</li><li>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 0.50~0.75% <math>\Rightarrow</math> 0.25%</li></ul>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 증액: 25조 원 <math>\rightarrow</math> 30조 원('20.2.27) <math>\rightarrow</math> 35조 원('20.5.14)</li><li>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단순매매 및 RP매매) 확대</li><li>정례 RP매입 제도 도입: 한시적으로 제한 없이 공급</li><li>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 확대: 5개사 <math>\rightarrow</math> 16개사</li><li>「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 신설: 3개월간 한시적으로 10조 원 한도</li></ul>
시장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대출, 특례보증, 수출보증·보험 등 유동성 지원 및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li><li>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회사채신속인수제, P-CBO 등 금융시장 안정조치</li><li>저신용등급 등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최대 20조 원)</li></ul>
외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계약 체결('20.3.19)</li></ul>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거액 익스포저 한도규제 연기('21년 이후)</li><li>대출금 위험값 하향조정(증권사)</li><li>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건전성 분류기준 유지</li><li>예대율(5%p하향), NSFR(20%p 하향), 유동성 기준 완화(여전·저축 10%p 하향)</li><li>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의무여신비율 완화(5%p 하향)</li><li>은행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국내은행: 10%p, 외은지점: 50%p)</li><li>외환건전성 부담금 경감</li><li>외화LCR 규제 완화(10%p)</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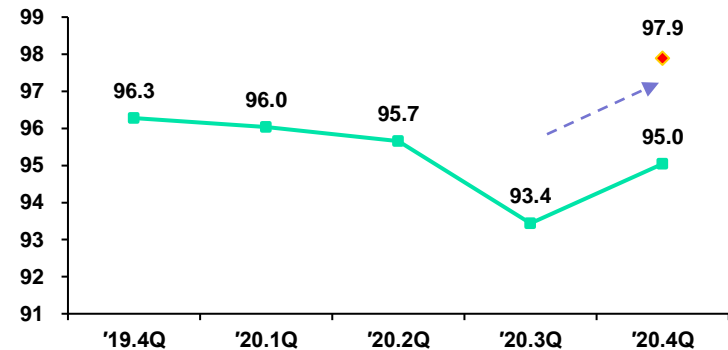
# 유동성 관련 지표와 추이

## BOK의 어음대출 추이(조 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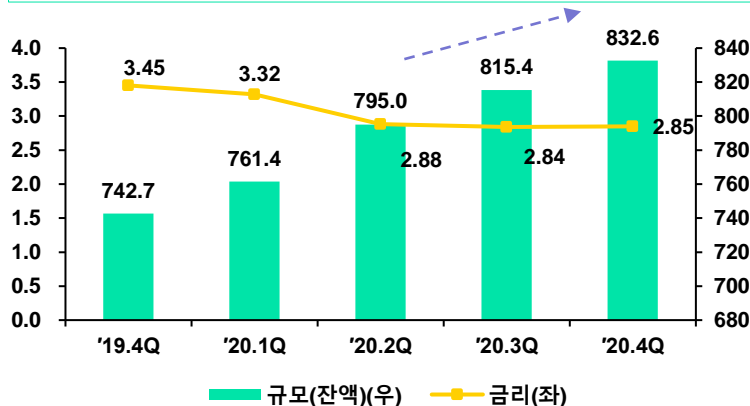
## 일반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주: 1. 원화대출금(말잔)/(원화예수금(말잔)+CD(말잔)), 빨간색 점은 신예대율(20.01 시행)에 따른 수치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1.0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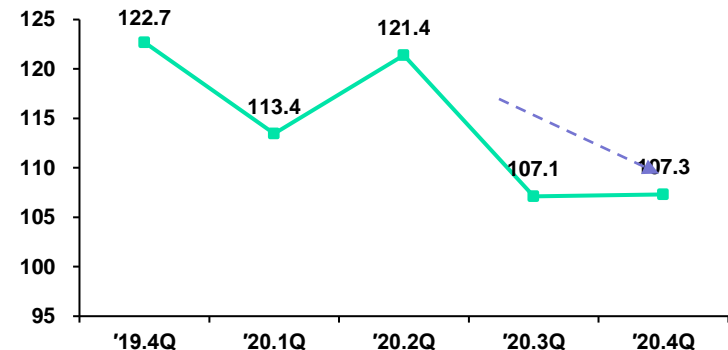
자료 : 은행연합회 은행통계정보시스템

## 중기대출규모 및 금리 추이(%, 조 원)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일반은행 외화 LCR<sup>1</sup> 추이(%)



주: 1. 총 고유동성자산/순현금유출액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바탕으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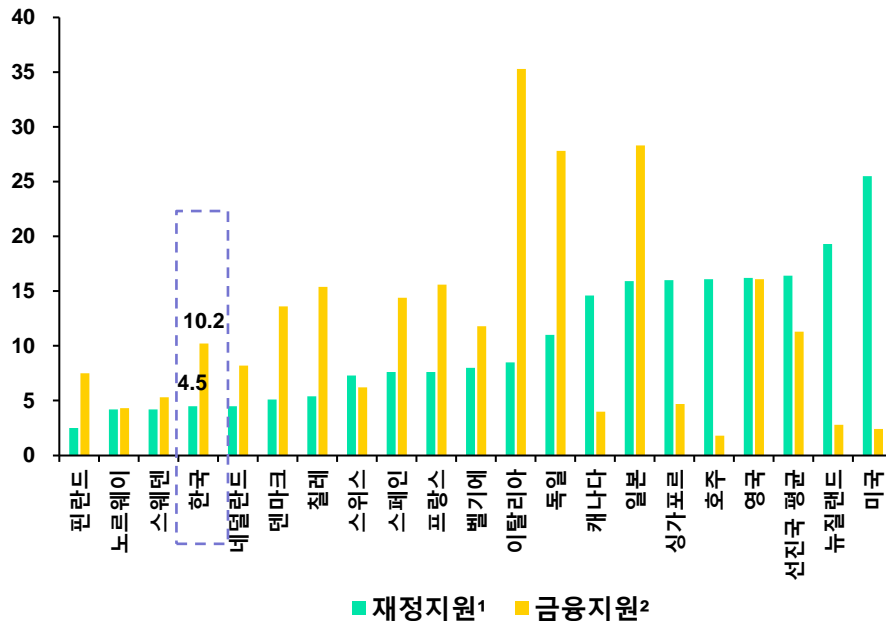


### 3) 평가와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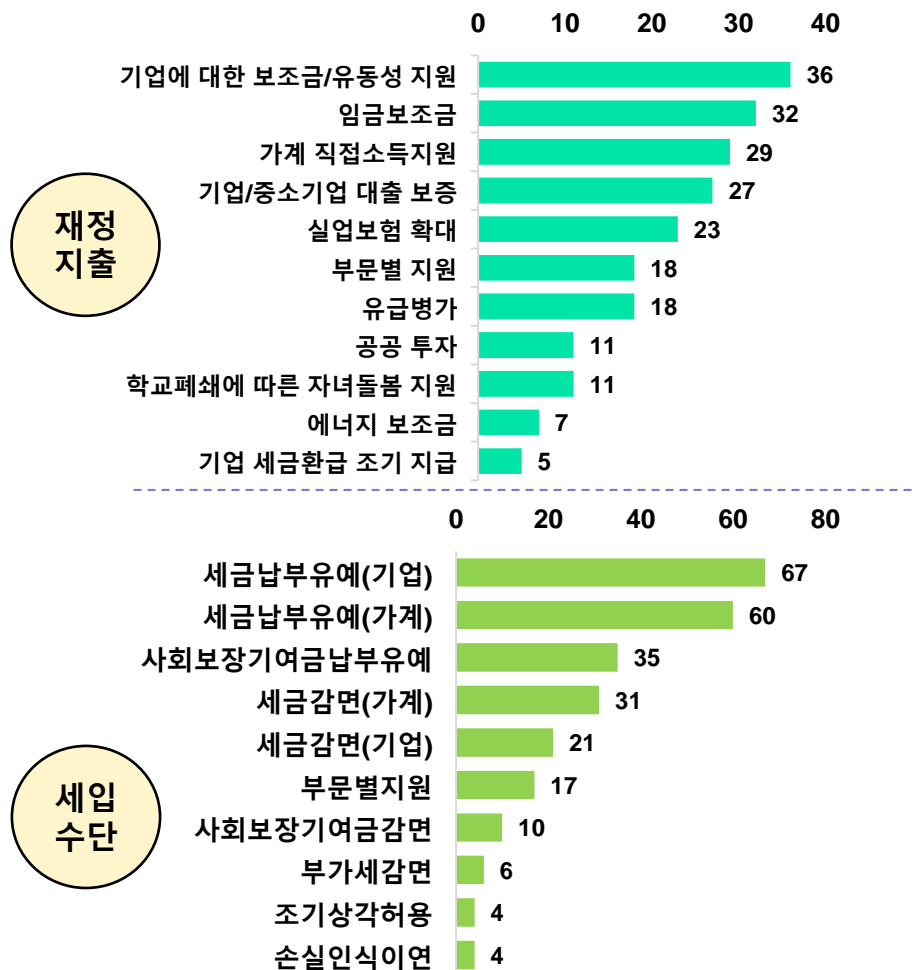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코로나 위기 대응은 해외사례와 비교하여도 대부분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으로 평가**
  - **제로금리, 추경**을 통한 정부의 주도적 역할, **금융시장에 대한 다각적인 안정화 조치** 등
    - 실물경제의 위축 완화와 금융시장의 조기 안정에 기여
  - 위기대응 수단이나 범위 등을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사용가능한(exploitable)”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한 것은 긍정적**
    - 참고: 박성욱(2020)

# 주요국의 지원금 규모와 내용

주요국 GDP 대비 코로나19 지원 비중(%)<sup>3</sup>



코로나 19 대응 재정지출과 세입수단 활용도(%)



주 : 1. Additional spending and forgone revenue  
 2. Equity, loans, and guarantees  
 3. 2020년 말 기준  
 자료 : IMF Fiscal Monitor



# 하방 위험 완화

- 기존의 위기극복 사례 활용,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상황,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및 회복으로 **하방 위험 완화**

-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와 건전성 규제 완화, 재정을 활용한 경제활성화 조치 등은 **기존의 위기극복 과정에서도 활용 경험**
- **거시경제 체력의 개선**으로 동 정책을 지지할 수 있었던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
- 항공, 운송, 음식숙박업 등 일부 내수업종을 제외한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기반 서비스의 확대, 반도체 및 2차 전지 등 **신성장 산업은 전체 경제의 위축을 완화**



# 후속 효과 주시할 필요

- 향후 한시적인 정부부채의 증가와 내수와 수출간 불균형, 소득양극화, 변동성 등 **구조적 문제에 유의**
  - (Fiscal consolidation) 장기적으로 국가부채의 상승 우려와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고령화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에 대한 유의적 시각**이 대두
  - (Imbalance) 일부 업종에 국한되던 양극화 현상이 자국생산 위주의 정책 혹은 글로벌 생산체계(ex: global value chain)의 변화 등으로 **구조적 불균형 심화 소지**
  - (Volatility)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높이고 시장 이자율의 상승으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시장의 변동성 확대** 우려



#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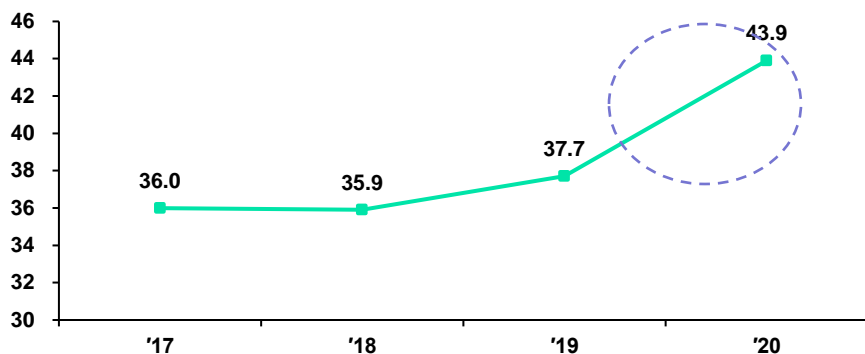
- 특히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국면에서 경기순환이나 사회적 변화, 대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Cyclical adjustment) 기존 조치의 해소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필요에 따른 금융안정성 확보
- (Social & Financial policy) 재정 확대는 세수기반 강화와 연금확충 등 장기적인 **재정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과 금융시장의 변화 가능성
- (Debt management)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상승 국면이 나타날 수 있어 **가계부채** 등 부채관리 필요성 증대
- (Paradigm shift) 수출 등 **글로벌 무역 패러다임\***은 한국경제와 한국금융의 성장기반이나 건전성 관리 등에 중요한 도전이 될 소지

★ 미·중 관계, 반도체 산업의 국가간 기술협력과 갈등, 신기술 경쟁, 환경규제의 강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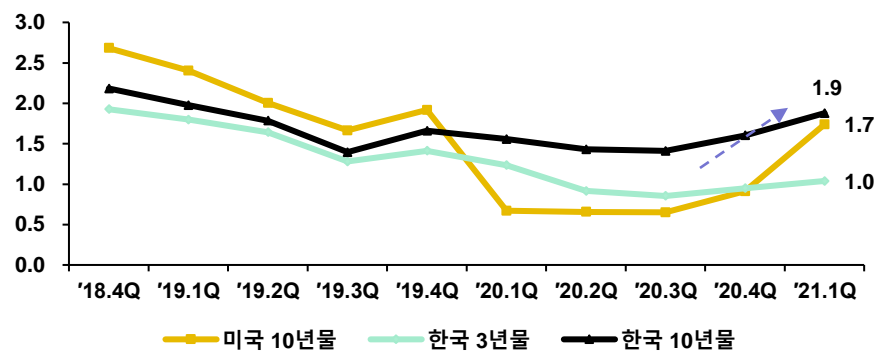
# 부채 상환 위험과 수출 변화

GDP대비 국가부채 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미국 및 한국의 장기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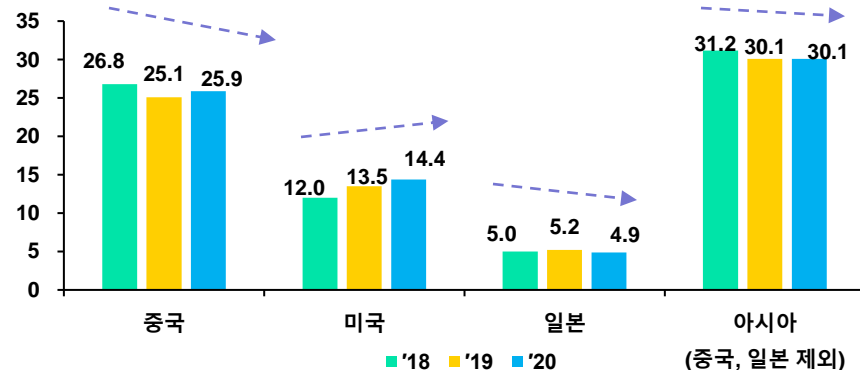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만기연장 및 상환 유예 실적(조원, 만건)<sup>1</sup>

	만기연장 (일시상환)	원금상환 유예 (분할상환)	이자상환 유예 (일시+분할상환)
시중은행 (건수)	81.5 (29.7)	7.3 (1.6)	0.06 (0.5)
정책금융기관 (건수)	39.0 (7.0)	1.3 (1.2)	0.06 (0.5)
제2금융권 (건수)	0.66 (0.5)	0.53 (3.0)	0.05 (0.3)
합계 (건수)	121.2 (37.1)	9.3 (5.7)	9.3 (5.7)

주 : 1. 2021년 1월 31일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주요국 수출 비중 추이(%)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V. 맺음말



# 첫째, 잠재 위험 측면

## ■ 실물경제의 정상화 이후 **출구전략에 대응한 잠재위험** 측면

- 백신 접종으로 *위기 이전 금융여건으로의 복귀*에 따른 영향 점검

- 국가별 출구전략의 시기나 속도\*,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나, 자산가격 조정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발작(tantrum)**에 따른 위험과 대응

★ **빠른 소비회복, 빠른 가격회복, 빠른 고용개선 ⇒ 빠른 정책기조 전환**





# 둘째, 제도 개선 측면

- 한국형 빅딜, 혁신산업의 육성, 사회경제적 역할 등 금융의 **새로운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
  - 디지털 및 녹색경제 등 **미래성장 모델**에 대한 금융의 역할 재점검
  -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쟁과 **선진형 경제체제 전환**에 대응한 금융 과제
  - **포용성, 소비자보호, 공공성 강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금융적 대응



# 셋째, 장기 전략 측면

## ■ 코로나 위기극복 과정을 **국내경제의 선진화로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모색

-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미래 위상**에 대한 논의
- 금융자산의 축적과 글로벌 운용에 따른 **금융산업의 역량 확충과 과제 발굴**
- 선진경제로의 전환 등 **새로운 거시경제 패러다임에 대응**한 국내 금융의 신성장 모델 모색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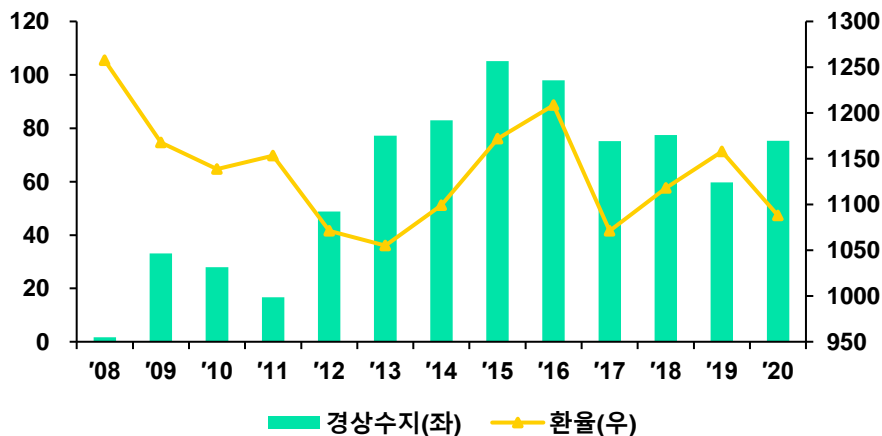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1) 거시 안정성 견고
    - 2) 금융자산의 축적
    - 3) 경영성과 개선과 안정화
    - 4) 양적 성장과 안정화 이후 대응 모색
  -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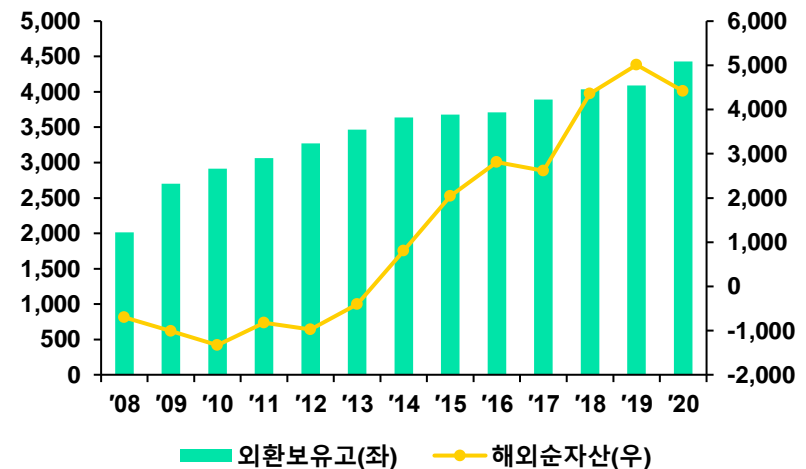
# 1) 견고한 거시 안정성

- 실물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에 힘입은 대외부문의 성장과 대외자산의 순증으로 금융산업의 **거시안정성이 크게 개선**
  - 코로나 위기로 인한 일시적인 시장불안은 정책적 조치와 글로벌 공조, 그리고 수출 경쟁력에 힘입어 빠르게 해소
  - 2008년 이후 높아진 경상수지 흑자 기조는 금융시스템의 대외 안정성 토대를 제공

경상수지 및 환율<sup>1</sup> 추이(억 달러, 원)



외환보유고 및 해외순자산 추이(억 달러)



주 : 1. 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 말일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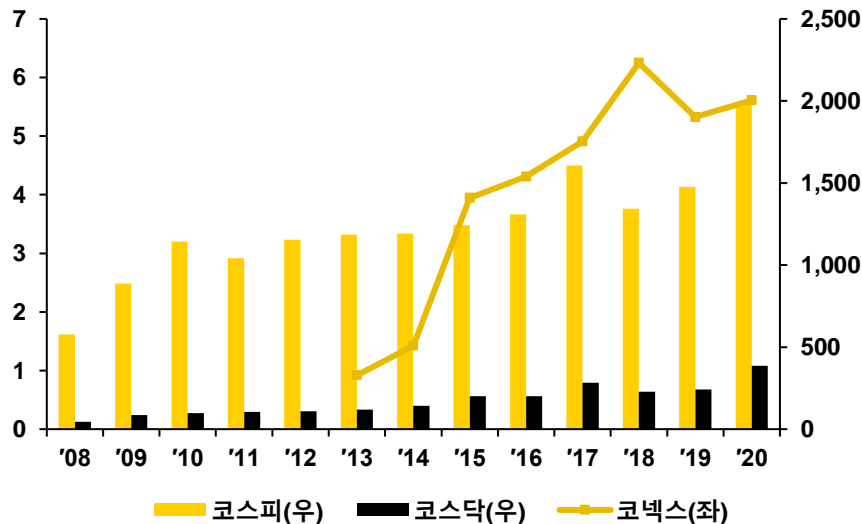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 금융자산의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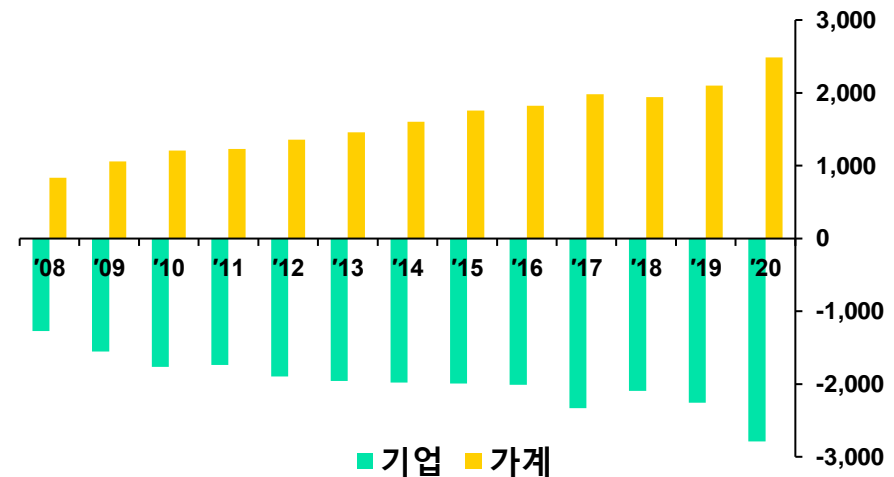
- 기업공개의 다각화, 주력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개선, 연금 및 장기저축의 축적 등으로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이 빠르게 진행
  - 기업공개 기준의 다양화와 주력기업의 비중 확대, 투자자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 기반이 크게 개선
  - 고령화에 따른 장기저축의 증가와 민간의 소득 증대 등은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 촉진

주식시장 시가총액 추이(조 원)



자료 :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민간의 금융자산 규모(조 원)<sup>1</sup>



주 : 1. 2008 SNA 기준, 기업은 금융법인 및 비금융법인을 포함, 가계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3) 경영성과 개선과 건전화

- 지속적인 구조개편과 저금리 기조 등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및 건전성은 **장기간 안정적인 국면**이 지속
  - 대형화와 그룹화 추세는 시장구조 개편을 통한 규모 또는 범위의 경제를 창출
  - 저금리 기조와 가계, 주택, 부동산 금융의 확대에 의한 장기간에 걸친 자산 성장과 조달 비용의 하락에 따른 부실채권의 축소로 국내 금융산업의 호황국면이 지속

업권별 자산규모(조 원, %)

	2008	2020	연평균 증가율 (CAGR)
은행	1,869	3,468	5.3
증권	140	608	13.0
보험	391	1,321	10.7
저축은행	69	919	24.1
신용카드	42	13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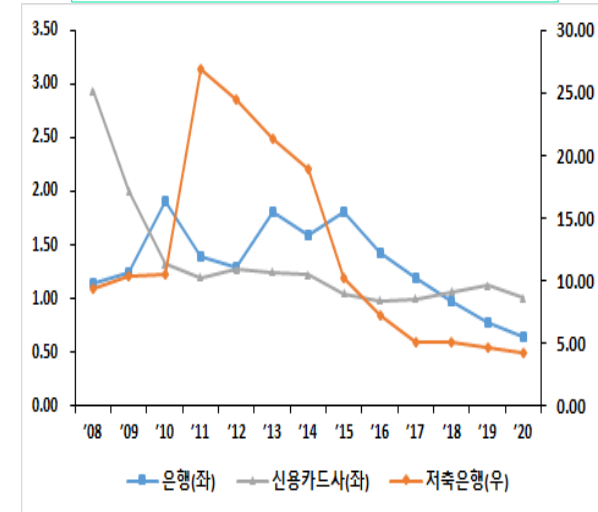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당기순이익(조 원, %, %p)

	2008 (A)	2020 (B)	연평균 증가율 (CAGR)	증감 (B)-(A)
은행	7.7(0.7)	12.2(1.1)	3.9	0.4
증권	1.4(0.1)	5.9(0.5)	12.6	0.4
보험	1.8(0.2)	6.0(0.5)	10.3	0.4
저축은행	0.3(0.0)	1.4(0.1)	12.7	0.1
신용카드	1.6(0.1)	2.0(0.2)	1.7	0.0
합계	13.0(1.1)	27.6(2.4)	6.5	1.3

주 : 괄호는 명목 GDP대비 비중  
자료 : 금융감독원

고정이하 여신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 4) 양적 성장과 안정화 이후 대응 모색

### ▪ 대내외 위기국면에 대응한 개혁 기조는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등 **긍정적 효과** 창출

- 주력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경쟁력 제고가 국내금융의 우호적 여건을 제공

- ① 양적 성장과 안정화 기반은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금융발전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 국내금융 여건은 **선진적 모델과 유사해지는 국면**
  - **현 “취약성”을 해소하여 질적 개선**으로 이어가는 노력
- ② 특히, 양적 성장과 안정화 이면의 불안요인이 정상화 국면에서 현재화될 가능성을 재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1. 평가의 세가지 측면
  - 2. 한국 금융의 강점과 장점
  - 3. **한국 금융의 약점과 문제점**
    - 1) 폐쇄적 문화와 대외적 한계
    - 2)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 3)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 4)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 5)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 6) 질적 도약의 필요성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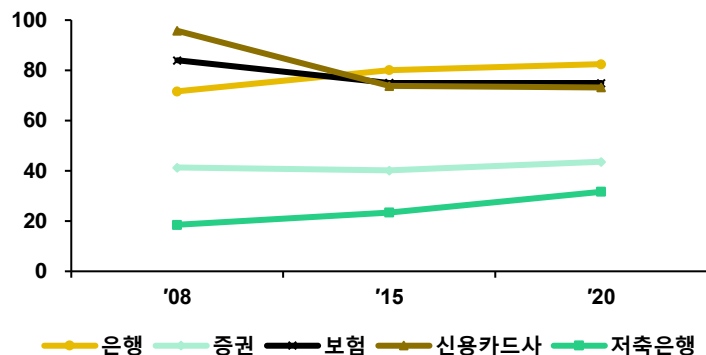


# 1) 폐쇄적 문화와 대외적 한계

- 국내위주의 영업, 기존 시장의 유지, 대외적 한계는 **금융의 개방성과 다양성, 고도화를 제약**
  - 국내 금융산업은 수 차례의 위기 국면을 겪으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중시함에 따라 **보수적인 규제 기조를 유지**
    - 신규 진입 제한과 혁신 도전의식(challenge) 약화
  - 유사한 상품의 가격 또는 서비스 경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폐쇄성과 대외적 한계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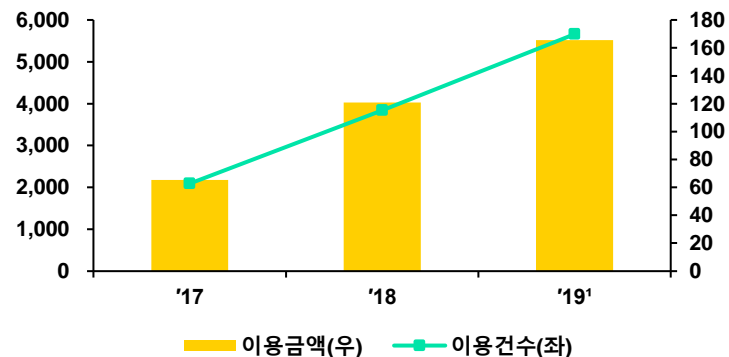
# 시장구조의 정체, 혁신의 한계 및 내수화

금융업권별 CR4 추이(%)<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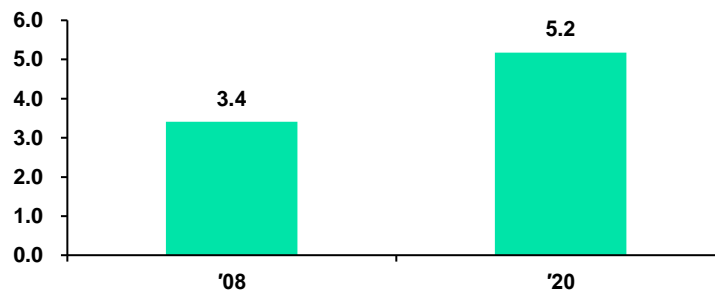
주 : 1. 국내 지점 총자산, 일반은행, 생명보험 기준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간편결제 성장률(천건, 십억 원)<sup>2</sup>



주 : 1. 2019년 1~9월 중  
2. 일 평균  
자료 :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국내은행의 해외점포자산 비중(%)<sup>1</sup>



주 : 1. 해외자산/총자산 비중으로 해당 연도 말 기준환율 적용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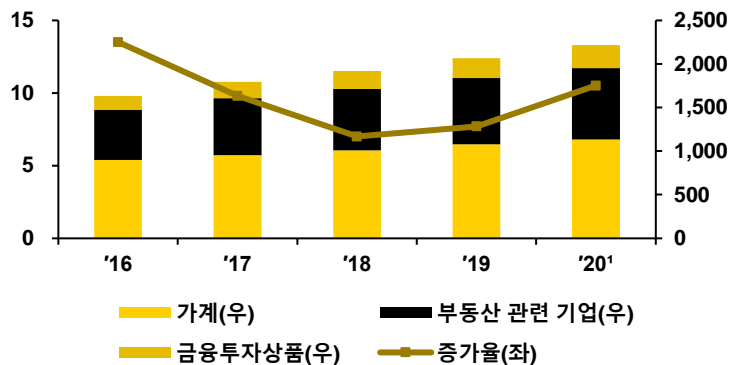


## 2)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

- 국내 금융산업의 중개기능은 아직까지 **부동산 담보와 정부의 간접보증**을 주로 활용
    - 최종 손실위험 최소화
    - 동산담보나 IP, 기술력 및 사업성 평가 등 다양화 ⇒ **긍정적**
    - 원칙적으로 정부의 보증 등은 **중소기업 진흥책**
  - 동 관행은 미래의 성장가능성이나 모험자본의 축적, 자본시장의 심화, 상업성을 제한하는 등 **금융발전의 제약요인**으로 고착
    - 보증과 담보는 자금공급과 안정성 제고 ⇒ 반면 장기화 시 정부 보증의 비대화
- 은행 중심의 시장구조 ⇒ 적극적인(active) 인수 기능, 자본시장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역할분담과 책임공유 제약**
- 공적 보증 확대 ⇒ **시장자율에 의한 기업자금의 생태계 위축(내생적 성장 제약)**  
⇒ 기술력이나 창의력을 활용한 경제의 혁신기반 약화 ⇒ 민간금융의 발전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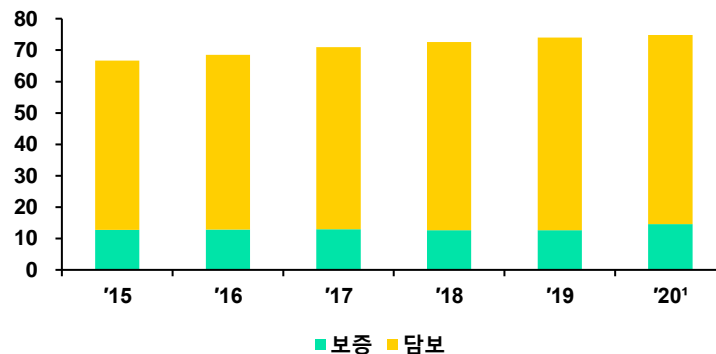
# 부동산, 담보와 보증 및 중소기업

금융권 부동산 익스포저 추이(% ,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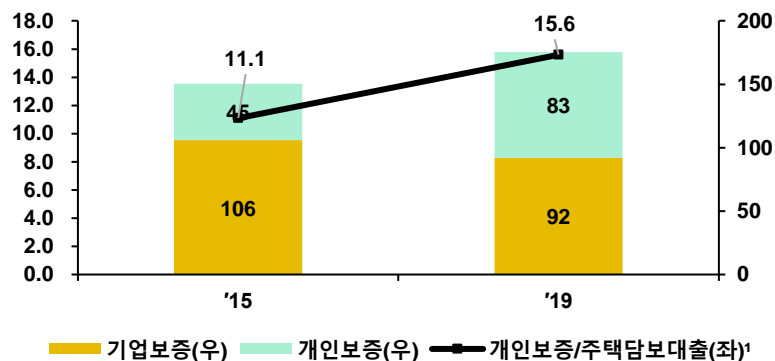
주 : 1. 2020년 9월말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중소기업 보증 및 담보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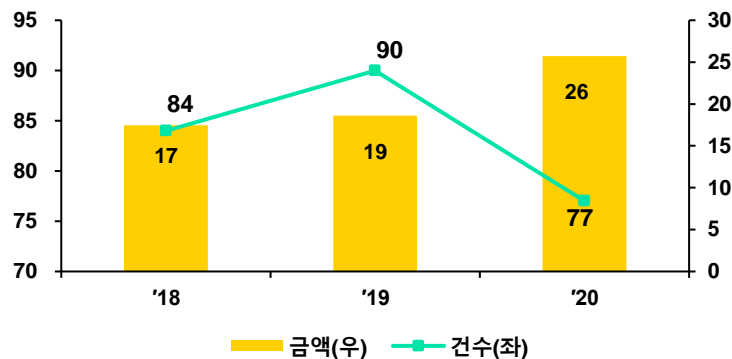
주 : 1. 2020년 6월말 기준  
자료 : 윤관석 의원 보도자료(20.10)

HUG의 보증규모 및 비중 추이(% , 조 원)



주 : 1.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기준  
자료 : HUG, 한국은행

중소기업 기업공개 추이(건, 천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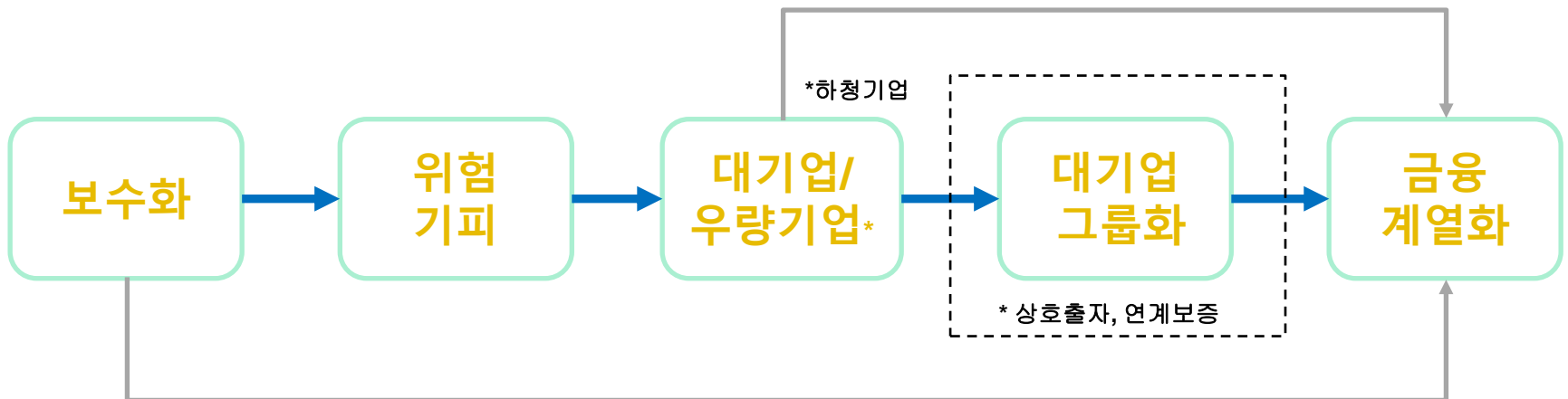


자료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 중개기능의 역동성 정체(계속)

- **취약한 위험분담 구조가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착**  
**하고,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역동성을 약화시킨 측면도 존재**
  - 자율화에도 불구하고 중개기능이 장기간 보수화됨으로써 **대기업 금융이나 우량기업 중심**의 대출 형태가 지속
  - 기업 간 상호출자나 연계보증에 의해 금융 리스크를 축소함으로써 **대기업 주도의 성장 구조 형성**에 유리한 금융계열화 초래





### 3) 금융사고와 신뢰도 상실

- 지난 10여년 간 경영진 간 내부갈등, 소비자의 피해보상 지체, 정책 및 감독의 영향력 심화, 기업 견제력의 약화, 불공정거래 재발 등 끊임없는 **불만, 불신이 누적**
  - 경영승계로 인한 갈등이나 불완전 판매, 보상의 지연 등 소비자 불만이 누적
  - 기업구조조정이나 총당금 적립, 소비자보상 등 금융권의 자율적, 선제적, 적극적인 해결은 기대하기 곤란
  - 분식회계, 금융사기, 정보유출 등 직간접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근본적인 해결 미흡
- 금융권이 “진정한” 신뢰도와 자율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장개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이 시급**
  - 지배구조의 자율성과 책임성, 경영의 독립성, 소비자에 대한 책임, 공정성 제고를 위한 시장개혁이 절실
  - 금융시장 참가자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
  -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엄밀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체계와 감독문화 정착** 등 강도 높은 정책 의지를 필요



# 지난 10여년간 금융권의 주요 사건

- 삼성 비자금 사건(2007~)
- KIKO 사태(2008~)
- 신한금융 내부갈등 사건(2010~)
- 저축은행 사태(2011.2~)
- 동양증권 기업어음 불완전 판매 사태(2013.9~)
- 카드정보 유출 사태(2014.1~)
- KT ENS 사기대출 사건(2014.2~)
- KB지주와 은행간 내부 갈등(2014.5~)
- 메뉴엘 기업의 무역금융 편취 사건(2014.9~)
- 엘시티 사업 관련 특혜 의혹(2015.9~)
- KAI 분식회계 사건(2015~)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2015~)
- 기업구조조정(대우조선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건; 2015~)
- 기업구조조정(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건; 2016~)
- DGB 금융지주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2016~)
- 금감원 채용관련 사건(2014년 경력직 변호사 채용 비리; 2016~)
- 금감원 채용관련 사건(2016년 신입직원 채용 비리; 2016~)
- 케이뱅크 인가 관련(2017~)
- 기업구조조정(금호의 금호타이어 인수 포기,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2017~ )
- 금융지주(하나, KB) 회장 연임 관련(2017~)
- 우리은행 채용 관련 사건(2017~)
- 하나금융 및 KB국민 금융 인사개입 의혹(2017~)
- 즉시연금 지급 관련 사건(2017~ )
-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징수 관련 사건(2018~)
- 삼성증권의 배당 사고(2018~ )
-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대출 사건(2018~)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2018~ )
-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건(2019~ )
- 라임자산운용·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사건 (2019~ )

*What's More?*



## 4)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

- 금융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경제의 선진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필수적인 산업이라기보다는 **실물경제 지원의 도구로 인식**
  - '90년대 말 금융자유화에 따라 독립적인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는 약화되고 여전히 “보호해야 할” **유치산업**으로 인식(*Peter Pan Syndrome*)
- 금융시장 개입이 시스템 안정성의 유지 이외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금융의 감시 역할과 독자적 가치창출이 왜곡
  - 경제 활성화나 재정정책의 수단으로 녹색금융, 기술금융, 혁신금융 등이 활용
  - **금융 논리 ≤ 정책 논리** ⇒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 제한
  - 정책효과 감소한 경영으로 금융의 독자적인 영역도 함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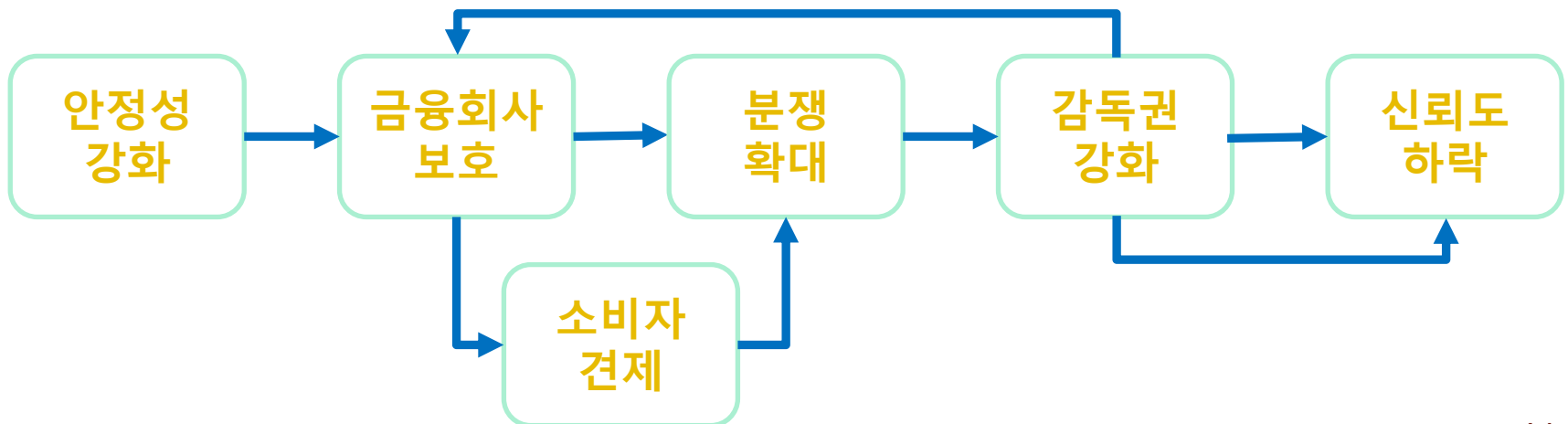


## 4) 금융의 도구화와 정체성 부재(계속)

### ■ 금융소비자의 입장보다는 금융공급자 위주의 감독으로 인해 자율성과 투명성이 여전히 낮은 편

- 위기에 대한 낙인효과로 인해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성 및 경영관리(balance sheet & governance risk)가 우선
- 그만큼 **감독권한도 강해지는 경향**
- 고객과의 접점이나 거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나 방지를 위한 감독은 상대적으로 위축\*

\* 높은 감독비용과 피감독기관에 미치는 낮은 영향력으로 인해 건전성 관리에 비해 덜 선호되는 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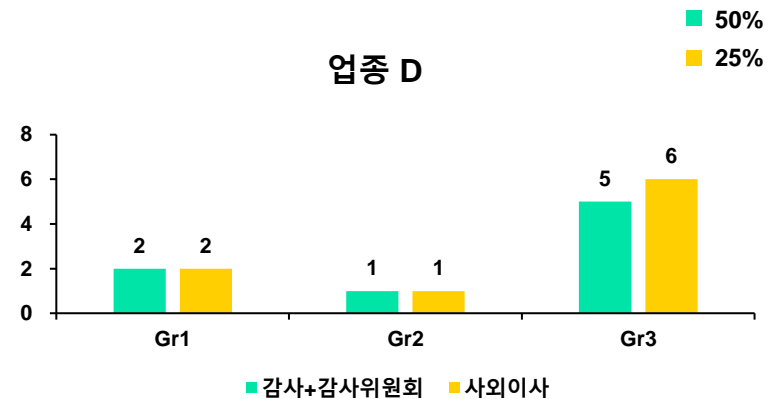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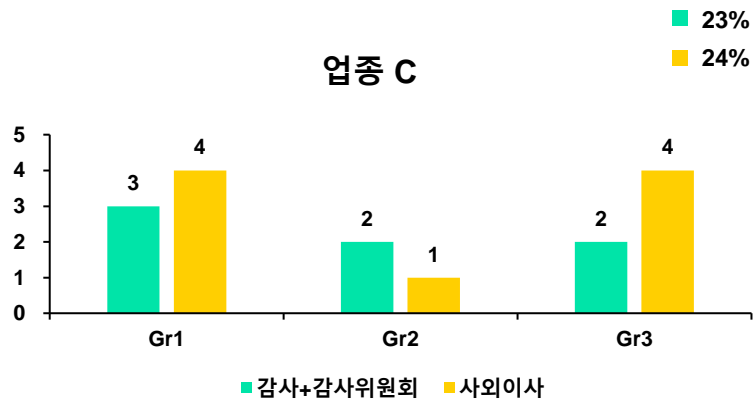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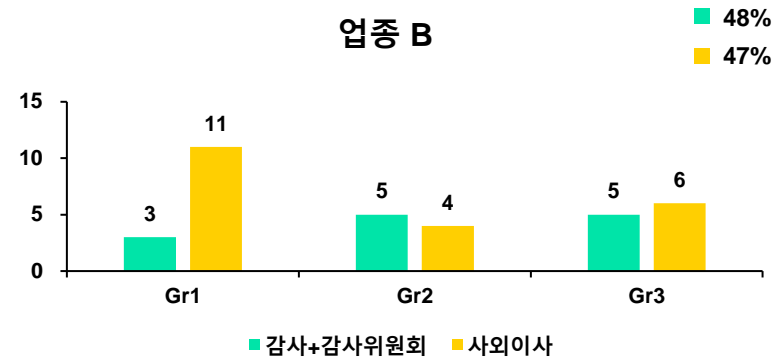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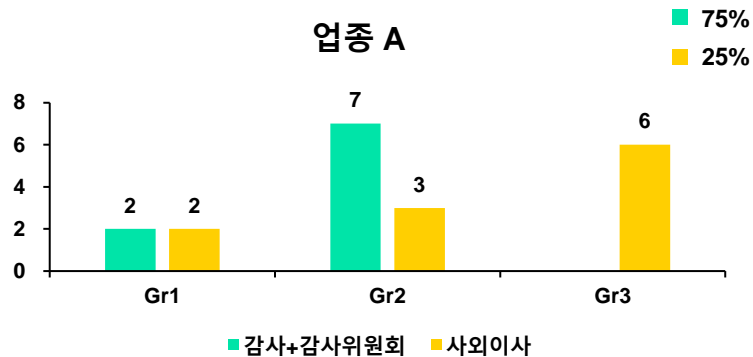




## 5) 시장과 감독 간 견제 미비

- 금융감독과 거시금융정책의 빈번한 상충은 금융감독의 **일관성을 훼손**
  - 대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한 우호적인 조치 등은 건전성 유지에 대한 **도덕적 해이** 초래
- 세척이나 가이드라인, 감독조치 등에 의한 지시형태는 준수비용을 높이고 감독권한을 강화시키는 **역효과**를 발생
  - 세부사항의 준수 여부에 초점을 둬으로써 **규제비용이 크게 증가**
  - 적발위주 감사의 편의성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
- 제재조치 등에 대한 빈번한 금융회사의 불만이나 논란은 금융감독기구의 **신인도와 독립성을 약화**
  - 감독권한의 독립성과 투명성, 일관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

# 전문성과 영향력<sup>1</sup>(명)



주 : 1. 자산기준 업종별 상위 10개사(2020년 말), 금융당국 경력소유자의 참여 비중, 그룹은 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 중복 이력은 가장 최근 이력으로 반영

자료 : 각 사 IR 자료



## 6) 질적 도약의 필요성

- 국내 금융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 규율 및 정책, 소비자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질적 개편** 필요
  - ① 개발경제에 국한된 시각에서 탈피
    - ⇒ 선진형 경제로의 전환에 적합하게 **금융의 긍정적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전환
  - ② 금융서비스의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
    - ⇒ 금융시장의 공정과 윤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이 필수
  - ③ 현재의 관행이나 정책목표, 소비자의 권한 등을 재정립함으로써 **질적(qualitative)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강한 개혁



## 6) 질적 도약의 필요성(계속)

- 이러한 질적 개편은 금융정책의 운영방식, 감독과 피감독기관 간 관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책임 등을 재조정, 명확히 하는 **범정부 차원의 시장개혁**이 요구
  - **선진형 금융체계(financial mechanism)** 구축
  - 장기적이며 **포괄적인 프로그램(comprehensive program)** 마련
  - **범정부(inter-governmental) 차원**의 추진
- 특히 **금융과 연계**되어 있는 사회적 요구 및 대외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외환위기의 방지체계, 고령화 대책과 금융세제, 연기금의 운용과 자산시장 육성 등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2) 최근의 금융정책: 연계성과 합의
    - 3) 당면한 현실적 질문
  - 2.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비전과 중기 목표
  - 3. 주요과제
- V. 맺음말



# 1) 새로운 여건과 도전

-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국내 경제금융 여건은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이 심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모색할 시점
  - 저금리와 고령화, 저성장 국면(new normal)으로 인해 선진국형 경제구조로의 가속화
    - ⇒ 기존의 **신흥국형 개발중심 금융모델의 재점검**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새로운 도전이나 기존 경제개발 방식의 한계 또는 취약요인 극복
    - ⇒ 새로운 경제금융 모델을 논의할 단계



## 1) 새로운 여건과 도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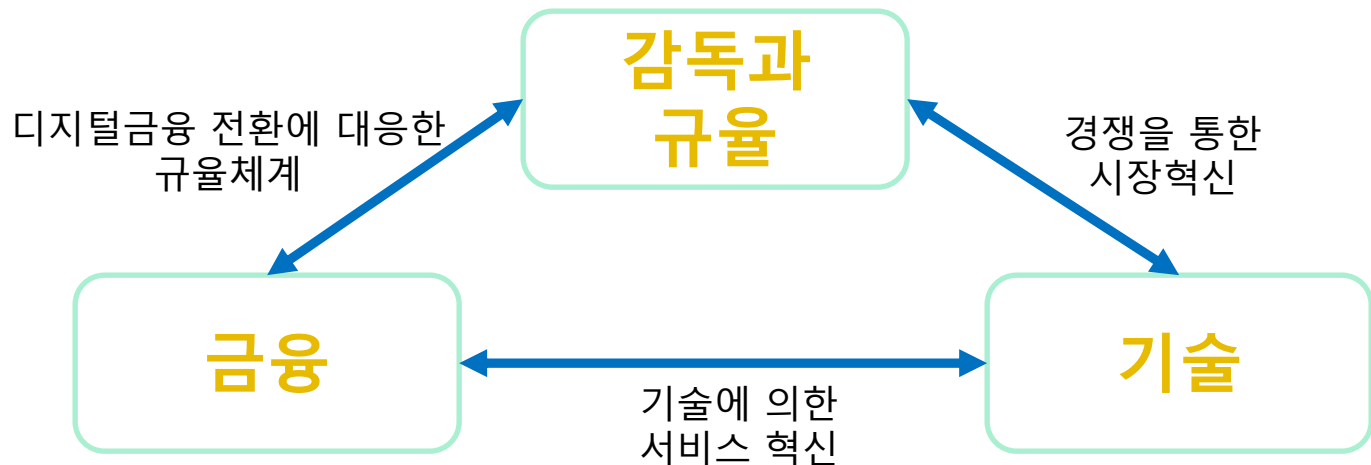
- 소득과 자산, 고용관계 등의 양극화 및 개인화 등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금융자산의 축적** 촉진을 위한 새로운 **금융역량 확보**가 긴요
  - 소득의 불균형, 자산격차 확대, 단기고용의 확대 등 **개인위험의 확대**는 경제주체의 자산 축적을 견인
  - 수익률 제고 유인(searching for yield)은 예금 및 부동산 위주의 **민간 자산 구조의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





# 1) 새로운 여건과 도전(계속)

- **지능화와 초연계성, 데이터 경제, 그리고 빅테크와 핀테크 등 기술 기반의 파격적 변화가 초래할 금융서비스의 새로운 규율이 요구**
  - 대면 중심의 금융서비스 ⇒ 비대면과 **디지털, 정보 중심**의 서비스
  - 현행 리스크 관리나 서비스 채널, 고객관리 등의 **기술적 전환**
  - 디지털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빅테크의 진출과 건전성 관리, 혹은 디지털 여건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 등



# 중장기 핵심 트렌드

1

## 거시경제

1%대 성장

Next Normal

저성장 만성화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지속



보호무역주의

美 中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 글로벌 불안정 증대

가계부채  
1726조원

기업부채  
2138조원

가계부실 가능성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

기업부채의 급증  
한계기업 중심의 구조조정

2

## 인구/사회

14%

고령사회 진입  
(생산가능인구↓)

고령인구 비중 14%  
2030년 인구 10% 이상 감소  
('16년 대비)

11.9배

상하위 10% 간  
소득격차(양극화)

富, 소비, 가치관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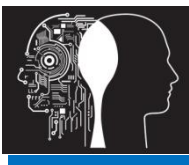


개인화(untact)

1인 가구 증가  
소비의 간편·개성화  
(공유경제, 구독경제 등)  
밀레니얼(Z세대)의 부상

3

## 기술변화 (4차 산업혁명)



지능화

인공지능(AI)  
머신러닝

INDUSTRY 4.0

초연결성

네트워크·융합형  
산업, IoT 등



핀테크

클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빅데이터



Data Economy

API를 통한 Data  
활용성 증대

4

## 규제/정책



혁신금융  
강화

창업/벤처 및  
혁신성장 지원



경쟁 유도

인허가 규정 완화·  
핀테크 육성



디지털금융의  
활성화

결제시장의 변화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규제 준수비용  
증가 50



## 2) 최근의 금융정책: 연계성과 함의

- 최근의 금융정책은 혁신금융과 포용성, 디지털 금융 등에 시장주도적 역할을 강화 ⇒ **현 정부 내에서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 간 연계성은 심화**
- 또한 디지털 금융혁신과 정책서민금융의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 등은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관련**
  - (디지털 금융혁신) 공동결제망 구축, MyData 산업 육성,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허용
  - (서민금융의 포용성, 접근성) 최고금리의 인하, 햇살론(예: 햇살론youth)의 다양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확대, 공급규모의 확대
  -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6대 판매행위 원칙, 징벌적 과징금, 청약철회권 강화, 조정이탈금지 제도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함께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 앞으로 시장이 선도하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와 역할 등을 조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
  - 정책적 리더십이 긴요하지만, 시장실패 또는 보완에 초점을 둘 필요
    - ⇒ 시장의 자율과 경쟁을 통해 역동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 범위와 대상을 적정화(arm's length principle)**하는 데에도 노력



### 3) 당면한 현실적 질문

Q: “어떻게 현 상황에서 질적 개선을 통해 선진형 금융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인가?”

- ✓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 또는 저성장 국면을 넘어서는 **국내 경제의 성장성 회복**
- ✓ 금융회사들의 **글로벌 최고 수준 경쟁력과 역량 보유**
- ✓ 금융회사가 **고객자금의 충실한 청지기(stewardship)**로서 신뢰성 확보
- ✓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에 대한 시장의 기대 수준 **하향 조정**
- ✓ 금융정책 당국이 중장기 비전 하에 **책임성 있는 정책 집행**
- ✓ **금융규제 감독 시스템이 포괄주의 체계(negative system)**로 변모
-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수요자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
-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균형적 보유**
- ✓ **금융 낙오자**들이 시장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포용적 시스템** 구축
- ✓ **해외 금융시장에서의 의미 있는 수익창출**
- ✓ **해외 주요국의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 안정 유지 등**



#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2.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비전과 중기 목표**

3. 주요 과제

V. 맺음말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비전과 중기목표

-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목표는,
  - 금융의 핵심가치(정체성)를 높여 건실한 실물경제를 지원하며,
  -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한 선진형 금융체계 구축으로 금융자산국가의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의 사회경제 기여도 개선

## 핵심가치의 확장

자유롭고 경쟁적  
(free and competitive)

건전하고 견고한  
(sound and robust)

금융소비자 지향적인  
(consumer-oriented)



## 지속가능한 금융비전

금융자산 국가의  
실현

선진형 금융체계  
구축

금융의 사회경제 기여도  
제고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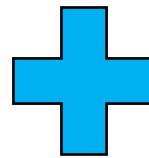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1. 한국 금융의 진취적 탐색
  - 2. 새로운 금융시스템 구축의 방향: 비전과 중기 목표
  - 3. 주요과제**
    -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 전환
    -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3) 금융감독조직의 개편: 견제와 균형
    -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V. 맺음말



#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인 전환

- 대외안정성 제고는, 실물 경제의 규모와 대외개방 수준을 감안, 점차 민간의 **대내외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선진형 구조**로 전환

- (Last-resort role) 대외 안정성은 **외환보유고**의 지속적인 확충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
- (Stabilizer role) 수출과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이 **대외 금융자산의 축적**으로 이어져 대외안정성을 유지하는 선진형 구조로 전환



- 대내외 금융자산 확충 정책으로 **거시적 대외 안정성 확보**와 **개방형 금융시스템**으로 전환

- 자본시장을 통한 대외채무 증가 등에 대비하여 **준비자산 확충**은 필수
- 민간의 금융자산 축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역외자산을 통해 국부를 창출**
- 공공과 민간의 역외자산 축적으로 외환시장의 국제화와 **원화 위상을 제고**





# 1) 거시금융 안전판의 근본적인 전환(계속)

- **대내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 예금보호기금의 확충 또는 중앙은행의 특별유동성 제공, 외화유동성 관리 등 금융시스템의 안전장치를 **개방형 금융시장에 맞게 개편, 강화**
  - 금융위기나 시스템 위기 시 사후 대응력을 높이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긴급유동성 지원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위한 **상시적 금융안정시스템의 마련**

(예시)

예금보험한도 상향과  
요율 조정 등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기금 확충

시장안정기금  
상시화

긴급유동성대출  
확충(외화 포함)

금융안정 관리체계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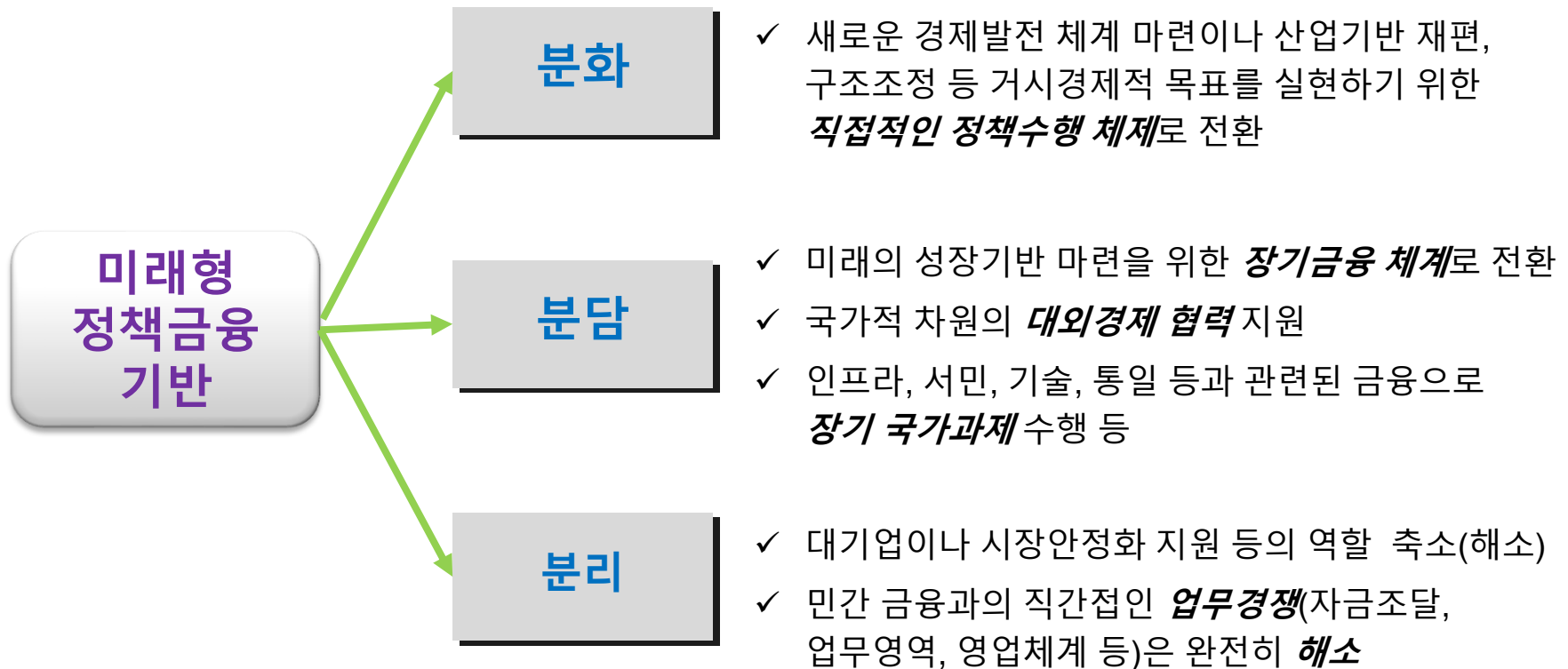
##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

- **금융정책은 건전성 감독과 완전히 독립될 수 있는 법률기반을 마련하고, 재정 또는 통화정책과 연계할 수 있는 상위조직 체계 마련**
  -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금융정책은 건전성 규제와 엄격하게 구분될 수 있는 **법률적 토대** 마련
    - 금융 감독에 대한 법적 위임 명시화, 감독기구의 책무와 책임 부과, 감독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등으로 독립성 확보
  - 금융정책은 가능한 정책금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 안정 등 거시금융정책은 재정 및 통화정책과 통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등과 같은 **상위조직 체계 (umbrella or control tower)**를 마련



##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계속)

- 민간금융과 정책금융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함으로써  
새로운 정책금융체계로 전환





## 2) 금융정책 방향의 재설정과 재설계(계속)

### ■ 금융감독의 자율성과 책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개편

- 정치적 혹은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건전성 감독이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safeguard)** 마련
  - 신분 보호장치의 마련, 이해상충의 금지, 외부감사 체계의 개편 등
- 금융감독정책에 대한 민간 중심의 자문위원회 또는 민간이 다수 참여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 등 지배구조 개편
-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의 독립성 및 공정성,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감독체계 조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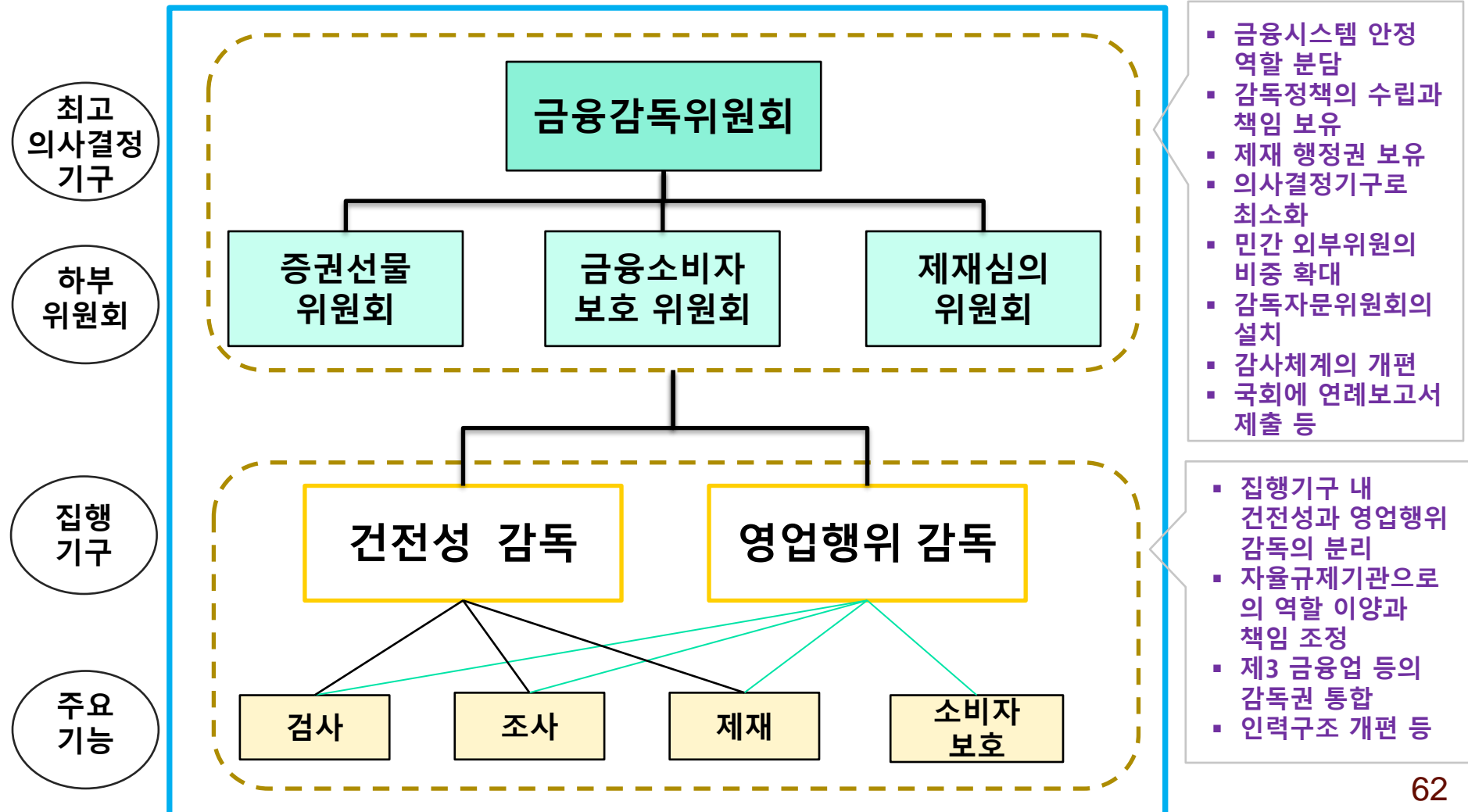
### 3) 금융감독조직의 개편: 견제와 균형

-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구분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체계 구축
  - **금융정책**은 거시경제 정책을 운영하는 조직에 의해서, **금융감독**은 전담조직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정책과 감독 권한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
- 금융감독 전담조직으로 **통합 금융감독원**을 설치
  - 내부에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감독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통할
    -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민간 참여 등 보다 개방적인 지배구조를 통해 외부 감시가 가능토록 배려
  - 감독 집행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감독을 분리**하여 수행



# 금융감독체계(안): 검토 과제 등

## 통합 금융감독원





##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

- 국내 금융법률 체계는 디지털 금융시스템이 초래할 개방, 경쟁과 혁신에 대비하여 **통합금융법 형태**로의 전환 모색
  - 업종별 규율체계로는 경쟁과 개방, 혁신 촉진에 한계
  - 대외개방과 국제화 대비하여 기능적 규율의 신속한 도입 필요
- 통합금융법은 선진형 금융시스템 전환을 위한 개혁과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 예: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 해외시장과 국제경쟁력, 글로벌화에 초점



## 4) 디지털과 금융법률 개편: 업종과 기능의 복합모델 전환(계속)

### ■ 디지털 금융의 촉진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기능적 규율의 도입** 절실

-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의 **형태**는 지속적으로 변모하나, 금융시스템이 수행하는 역할, 즉 **기능(function)**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Bodie, Merton, and Cleeton(2012))

### ■ **기능적 규율에 의한 통합과 업종별 공통규제 방식 병행**

- 판매, 전자금융거래, 연금규율 등은 기능적 접근
- 업종별 공통규제의 통합은 대륙법 특성과 상위법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평가
- III. 포스트 코로나 국면의 한국 금융: 도전  
과제
- IV. 한국 금융의 발전 방향
- V. 맺음말



# 선진금융체계 구축을 위한 위원회 구성

독립기구(대통령 또는 국회 산하)로 구성하여  
향후 10년을 위한 청사진 제시

< 예 시 >

- 선진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금융의 새로운 장기비전 설정
- 금융자산 축적을 통한 복지국가의 토대 마련
- 자산운용의 글로벌 기반 마련을 위한 금융, 세제, 외환규제 개혁
- 지식 및 데이터 경제 등 신경제 주도를 위한 정책금융체계 개편
- 디지털 금융의 글로벌화를 위한 금융인프라 개선
-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시장개혁 프로그램 마련
- 선진형 금융감독 체계 및 감독관행 정착을 위한 종합 청사진
- 디지털 금융을 포괄하는 복합금융법 체계로 전환
- 금융자산을 활용한 대외안정성 관리체계 구축
-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프로그램 마련



# 금융을 통한 ‘좋은 사회’의 구현

- 함께 잘사는 정의롭고 열린 사회(Good Society)를 확립하기 위한 금융의 미래역할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한 시점(Shiller(2012))
  - 자유, 평등, 경제적 번영과 안정 등 ‘좋은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금융이 해야 할 책무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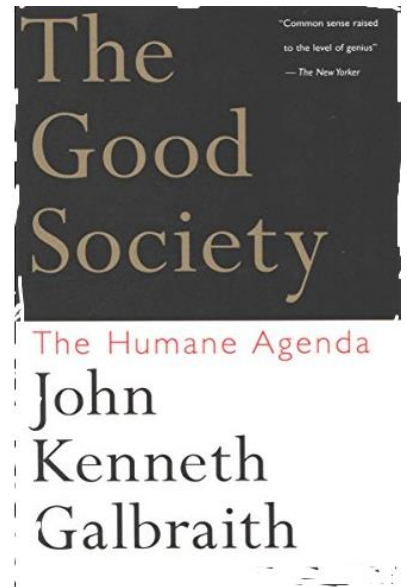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의 권한이 존중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정책을 통해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평등

금융소비자가 보편적인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필요에 상응하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소한의 금융자산 축적을 보장함으로써 금융에 의한 불평등을 방지

번영과 안정

금융서비스를 통한 국부 창출로 금융의 거시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금융위기의 선제적인 방지와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선진경제로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 참고 문헌 >

- 구본성·이순호, **국내 금융산업의 2030 비전과 과제: 개관 -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KIF 연구총서 2020-01, 2020. 10.
-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금융행정혁신보고서**, 2017.12.20.
- 박성욱, **주요국의 코로나19 위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KIF VIP 리포트 2020-09, 2020. 7.
- 정중호, “금융산업의 현황과 미래,”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강연 자료, 2021. 4. 15.
- 최흥식, “한국 금융의 나아갈 방향: 금융자산국가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센터, 2015. 3. 4.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Crown, 2012.
- Bodie, Zvi, Robert C. Merton, and David Cleeton, **Financial Economics**, 2<sup>nd</sup> Edition, Pearson, 2012.
- Calomiris, Charles and Stephen Haber, **Fragile By Desig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 Crane, Dwight et al., **The Global Financial System: A Functional Perspective**,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1995.
- Desai, Mihir, **The Wisdom of Finance: Discovering Humanity in the World of Risk and Return**, Houghton Mifflin Harcourt, 2017.
- Galbraith, John Kenneth, **The Good Society: The Humane Agenda**, Mariner Books, 1997.
- Kay, John, **Other People's Money: The Real Business of Finance**, Public Affairs, 2015.
- Ostry, Jonathan, Prakash Loungani, and Andrew Berg, **Confronting Inequal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9.
- Rajan, Raghuram, **Fault Lin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 Shiller, Robert, **Finance and the Good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 Turner, Adair, **Between Debt and the Devil**,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 Wolf, Martin, **The Shifts and the Shocks**, Penguin Press, 2014.



**EOD**